오리산업 발전에 전력투구키로

국내 오리산업이 가금산업의 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1년 축산업 생산액 14조 9,909억원 중 7위를 차지한 오리는 1조3,966억원으로 날개를 달았다. 육계산업과 산란계 산업의 뒤를 이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내 오리산업이 우리나라 가금산업의 잠재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국내 오리산업은 부업형태에 머물러 있었고, 지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심지 잔반 사료를 이용한 알생산이 목적이었다. 더욱이 도시화와 계란과의 경제성에 밀려나 낙후성을 면치 못했지만, '70년대로 접어들어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지역적으로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난 '71년 25만수에 머무르던 것이 '73년 48만수, '76년 56만수로 늘어났고 '80년대로 접어들어 부업에서 전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오리 계열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계열화 사업은 오리식당과의 연계로 활기를 찾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국내에는 1955년 기독봉사회를 통해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종란 6만개와 160수의 카키캄벨종이 도입돼 산란용과 재래종과의 교잡종이 사육되어 왔었다.

그러나 영국 체리베리사의 종오리 2천수가 도입되면서 국내 오리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2~3개월을 사육해야 2.5kg에 도달했던 종전의 오리와 달리 50일령에 3kg에 도달하는 육용오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985년 국내 최초로 도압장이 설립되면서 '91년 178만수로 급성장한 오리산업은 '92년~'93년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라는 복병에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가격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이 같은 와중에서 '92년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오리협회가 창립됐다. 우여곡절 끝에 창립된 오리협회는 초대 장규호 회장을 비롯한 선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94년 7월23일 한국오리협회 현판식이 있었다. 협회 사무실 겸 오리농장에서 치러진 한국오리협회 현판식은 장규호 회장과 당시 축산기술연구소 김경남 소장과 필자였다. 필자와 한국오리협회와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월간 「현대양계」는 초창기부터 오리산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으로 우리나라 오리산업이 추락하는 듯 했으나 소비자들의 중국산 오리고기 외면으로 2000년에는 재기, 5백만수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2001년 국내산 오리고기 40t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오리산업은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시련의 칼날은 떠나지 않았다. 2003년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오리산업에 있어 핵폭탄으로 비유된다. 재발되는 고병원성 AI로 오리산업은 엎친데 겹친 격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지만 오리산업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서 생오리 시장을 훈제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2005년에는 TV 대장금 프로가 오리고기의 약용 바람을 몰고 왔다. 국내 오리 생산은 16만9천1백여t에 달하고, 수입물량은 4천3백20t이며 국민1인당 소비량은 0.51kg에서 3.13kg으로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오리산업은 고병원성 AI등에 대비한 사양관리와 질병예방프로그램,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부합, 중국과의 철저한 품질차별화, 다양한 오리제품 개발, 논오리 등 친환경 농업 구현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월12일 안성팜랜드에서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전국오리인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농축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오리산업은 축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최고지령을 자랑하는 월간 「현대양계」는 이제 가금산업의 한 축인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오리뉴스를 섹션화하고 오리산업을 심층보도, 우리나라 오리산업 발전에 전력투구키로 했다.

현대축산뉴스 이희훈 대표이사 2012.12.04

이시은 남편 "아내 위해 오리불고기 만들 것" 훈남 입증

배우 이시은이 훈남 남편을 소개했다. 지난 12월 6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는 이시은 가족이 힐링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시은은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남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그동안 여행할 일이 없어 피곤에 쌓였다"면서 "그래서 가족들과 1박2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힐링촌 저녁 식사 담당은 이시은 남편. 그는 "아내가 오리 불고기를 좋아한다.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준비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 때 이시은은 "아이 둘을 낳고 살이 좀 쪘었는데 배우라 몸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리 고기를 즐겨 먹었다"면서 "결혼 17년 만에 처음 해 주는 요리"라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요리를 끝낸 이시은 남편은 오리불고기를 식탁 위에 올렸고 4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었다.

TV리포트 2012.12.06

대류방식의 오리구이, 회오리바베큐OK기 눈길

색다른 오리 바베큐 구이기가 출시되어 눈길을 끈다. '회오리바베큐OK'라는 기계는 직접 가열하지 않고 대류방식을 이용한 바비큐 구이기다. 기존의 오리요리는 굽거나 아니면 훈제된 오리를 데워서 파는 요리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회오리바베큐OK는 탑재된 세라믹 챔버가 열을 회오리방식으로 전도시켜 연기는 나지 않고 대상물이 타지 않게 안과 밖을 동시에 구워준다. 이 때문에 육즙이 살아 있고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다량 발산시켜 기름기를 적당히 제거해주고, 오리구이의 누린내와 잡

냄새까지 없애준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기계의 특별한 구조가 포화증기를 생성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육즙의 손실을 방지하여 주고 짧은 시간에 생오리에서 삼겹살 족발 닭 훈제요리까지 요리할 수 있어 쓰임새가 다양하다. 넓은 작업창과 상부회전구조로 편리성을 더했다. 대류방식으로 구운 오리는 맛도 특이하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좁은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여 식당, 반찬가게, 호프 등 매장 앞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1개 매장, 2개 점포운영 효과도 있다. 본사에서 물류를 책임지므로 재고부담이 없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 및 레시피도 전수해준다. 본사 방문 시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는 시연회를 개최하므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라이프 2012.12.13

김앤젤라 피덮밥 시식, 오리 생피에 밥비벼 '쩝쩝' 경악

미녀 리포터 김앤젤라가 '생피덮밥'을 시식해 충격을 줬다.
케이블 채널 tvN '비주얼 서스펙트'에서 김앤젤라는 진귀한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영상 속 특별한 음식을 직접 맛보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세 번째 동영상은 생피덮밥이었다. 용의자팀(속이는 팀)이 전문가팀(맞추는 팀)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상황에서 김앤젤라는 새빨간 오리 생피에 밥을 비벼 먹는 메뉴를 직접 시식해 놀라움을 안겼다.
충격적인 비주얼에 전문가팀은 물론 같은 용의자팀까지도 기함을 하며 선뜻 맛보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김앤젤라는 양세찬의 권유에 가장 먼저 용감한 시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2012.12.15

화순군 수렵장 '흰뺨검둥오리' 추가 고시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5일부터 오리류(흰뺨검둥오리) 사냥이 가능하도록 추가 고시 한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금년 수렵장부터 포획동물 확인표지(Tag)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포획동물 확인표지(Tag)를 미부착하거나 수렵제한구역 안에서 불법 사냥 행위로 주민을 놀라게 하여 피해를 줄 경우 수렵장 고시 위반으로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고시에 수렵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으로 포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렵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 3종, 멧비둘기, 꿩, 비둘기, 흰뺨검둥오리 등 조류 6종을 전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에게 포획을 허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수렵장 신청 접수 및 확인표지(Tag) 구입을 위한 수렵인은 12월 17일, 18일, 26일,

2013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총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을 통하여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은 가급적 수렵 가능지역 출입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남현 기자 2012.12.24

'축산업 허가제' 시행 앞두고 부동산 투기 '들썩'

내년 2월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가 엉뚱하게도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있다.
사육규모에 따라 허가제 도입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허가제 시행 이전에 해당 규모의 축산시설을 '투기 목적'으로 확보하려는 심리가 작용해 양계장과 양돈장 같은 일부 선호시설에서는 이미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 · 돼지 · 닭 · 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기업규모)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4가지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다른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워진 신규 허가기준 때문에 '사육규모별 허가제 시행 이전'에 해당 사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시설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가축사육업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양계장(육계)과 양돈장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 민원을 이유로 관련 조례까지 제정, 신규 허가를 불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의 사육시설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에서 부동산 중계업을 하는 김모(50)씨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육시설 신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매매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매물이 프리미엄까지 붙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사육규모가 큰 시설부터 허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규모의 사육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갈수록 작은 규모의 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허가제가 시행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스1 김성식 기자 2012. 12. 05

건폐율 조정… 적법화 기준 마련 올인

육계 · 오리, 비닐 · 수분조절재 도포시 축사 인정
분뇨시설도 가설건축물 포함… 건폐율 확대 추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는 '무허가 축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며, 말 그대로 농식품부 방안이다. 앞으로 이 개선방안을 놓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반영, 개정하게 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내놓은 이른바 '가축분뇨 관리 및 선진화 대책' 중 쟁점 사항은 크게 3가지다.

그 첫 번째는,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그리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이다. 두 번째는, 4대강 수계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에 따른 수변구역 및 수질 목표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확대이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아 소호라든가 하천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의 대폭 강화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약 5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축산업 기반이 반토막 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제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정을 하지 않았거나 20~50%로 하향 설정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가능토록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즉,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을 가설건축물로 전환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육계 · 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앞으로는 축사 바닥에 비닐 · 수분조절재를 도포하면 축사로 인정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금류 사육농가의 무허가 축사 원인과 배출시설 미신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사거리제한과 관련,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해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합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때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시설 중 한육우를 제외한 젖소에 한해 운동장

을 허용하는 것을,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육우 축사에도 운동장 시설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의 피난설비 중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축사 및 가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사, 작물 재배사 등 피난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시켜 건폐율의 상향조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 사육제한 지역 내 축사의 경우,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전토록 하는데 반해 지정 이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쇄시킨다는 계획이다.

방류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T-N(총질소)은 법률 시행 3년 후 500mg/ℓ , 6년 후 250mg/ℓ 적용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 반입 축사규모도 3천두에서 5천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2.12.17

고 곡물가시대 맞춤형 사양표준 나왔다

농진청,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판 나와

높은 곡물가시대에 적합한 가축사양표준이 새로 나와 양축농가들이 사료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 국립축산과학원은 고 곡물가시대에 적합한 가축사양 표준을 추가한 한국가축사양표준 2차 개정판을 출판했다.

가축사양표준은 가축의 생명유지와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별 요구량을 정해 놓은 것으로, 사료의 경제적 이용과 생산능력의 향상 등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1940년대부터, 영국과 일본은 1960년대부터 자국의 사양표준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가축개량, 사료 종류, 사료가치 평가 등의 관련 기술과 항생제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등 가축사육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개정해왔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2002년도에 한우, 젖소, 돼지, 가금 4개 축종의 사양표준이 제정됐으며 2007년도에 1차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은 4개 축종과 표준 사료 성분표를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수행한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상된 증체량에 맞는 사료급여량, 가용 부산물 사료자원의 종류 확대, 사료배합프로그램의 이용 편리성 등을 개선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총 130여 명의 산 · 학 · 관 · 연의 가축영양 사양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사양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면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해 왔다.

최근 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적정 사료급여량을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할 때에 한국가축사양표준과 한국표준사료성분표를 개정함으로서 한우와 젖소 뿐 아니라 단위가축인 돼지

와 가금류도 기존의 사료와 함께 농식품부산물 등 부존사료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먹일 수 있어 현재보다 사료비를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에서는 이미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의 보급 확대와 고급육 생산율 증가로 사양표준의 효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는 사료 급여량 연구의 기준으로, 산업계에서는 경제성과 영양균형을 모두 갖춘 사료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농가는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료급여 관리 지침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한국가축사양표준에서 제시하는 영양소 요구량은 경제적 가축 사료급여 뿐 아니라 가축이 배출하는 분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더욱 보급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2.12.17

축산차량 GPS 의무화 '농가 불만'

가축 싣고 가축시장 등 가려면 불가피…부담 가중

내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농가 차량에 대한 GPS 장착과 관련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방역관리체계를 강화키 위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토록 하는 것이다. 등록대상은 크게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축산농가)로 나뉘는데, 축산농장 소유차량(화물차)의 경우 '그 밖의 등록차량'에 해당돼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농장에서만 운행하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 소유 차량에 GPS를 장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한우농가는 "차량등록제를 시행할 때 정부가 분명히 사료운반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농가 차량도 가축시장이나 다른 농장을 방문하려면 GPS를 달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농가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행법 상 가축이나 퇴비 등을 운반하지 않는 농가 차량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1년에 1번이라도 가축을 싣고 가축시장에 가는 경우에는 GPS 등록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게 돼있다.
이와 관련 현재 각 지자체들은 관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차량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등록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신의 차량이 등록 대상인지를 묻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GPS를 장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인지 농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등록 대상 여부를 농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내년도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약 6,500여대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만3,000여건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 신청이 연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농가가 소유한 화물차라 하더라도 가축이나 퇴비 등을 운반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2.12.20

구제역 · AI, 농가보상금 세금폭탄 "날벼락"

멀쩡한 가축 살 처분을 했을 뿐이고, 세금폭탄 맞았을 뿐이고

지난 2011년, 구제역과 AI(조류독감) 발생으로 살 처분에 내몰려 자식 같은 가축들을 땅에 묻고 망연자실했던 축산 농가들에게 어렵게 지급된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수 천 만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져 축산 농가를 두 번 죽이고 있다.
아직도 일부농가에서는 구제역과 AI여파로 농장이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폭탄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손을 놓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지난번 구제역과 AI로 인해 기르던 가축을 살 처분하고 한동안 입식도 못한 채 지내면서 보상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소득 없이 살아왔다.
보상이 시작되었어도 3개월이 지나 입식을 시작했고 일부 농장에서는 6개월이 지나서야 입식을 시작했다. 입식을 한들, 가축들이 성장해 출하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넘게 투자만 하며 소득이 없이 살아왔는데, 지난해에 받은 보상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인정, 수천만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농장이 아니라도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책에 따라 주변농장의 가축까지 살 처분에 동참했고, 정부의 정책에 전 재산을 버리다 시피하며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수 천 만원의 세금이다.
세금뿐만 아니다.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자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살 처분 농가들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다.
일죽면에서 돈사를 경영하는 한 농장주 P씨는 "세금을 내라기에 내기는 했지만 농가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세금으로 내기에는 너무 벅차고 억울했다. 이렇게 큰돈을 세금으로 내보기는 처음이며, 가축 살 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운면의 한 양계농장주는 "종합소득세 독촉장에 적혀있는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믿겨지지 않는다.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고 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먹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평택세무서의 관계자는 "보상금도 세금부과 대상이다. 구제역과 관련해 수용, 영업 보상하는 과정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제역이나 AI등과 같은 천재지변은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세무 관련자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성뉴스 박우열 기자 2012.12.04

전남도, 겨울 철새 본격 유입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농장 출입 통제 · 발판 소독조 설치 · 야생조류 접근 차단 등 당부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AI의 전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가 해남 고천암과 순천만 등 도내 철새 도래지에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어 축산농가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축산농가는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통제띠를 설치해 외부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또한 사료를 방치하지 않고 축사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별 발판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보유 방제기를 활용해 인근 소하천 등 서식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매주 2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AI 차단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닭 · 오리 사육농가 1천44농가를 집중 방역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축사 소독 여부, 농장 출입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등 농장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집중 지도 · 점검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달라"며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통제표시띠를 설치하고 사육시설에 사료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차단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브 김병화 기자 2012.12.05

전북 만경강 등 3곳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전북도는 지난 12월 7일 익산 석탄동 만경강 유역 등 3곳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만경강(익산 춘포면, 석탄동)과 금강(충남 서천군 장항) 등 3개 지역이다.

도는 저병원성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고병원성 병균이 검출될 경우, 반경 10㎞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내 농장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동 제한 기간은 AI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닭은 7일, 오리는 14일간이다.
도는 또 축산 농가와 유관기관 등에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별 발판소독조 사용, 축사 인근 그물망 설치 등 AI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동절기 AI 유입 위험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권철암 기자 2012.12.07

익산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예찰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 익산시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링 정비 및 비상근무체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인체감염 예방 체계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지정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재정비, 유사시에 대비하여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5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웹 보고를 강화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외출 후 손씻기와 목욕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과 조류 접촉 후 38℃ 이상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 가쁨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조기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는 감염된 닭 · 오리 (분변포함)와 접촉한 경우 발생농장 주변에 설정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과, 호주, 중국, 멕시코 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생지역을 여행한 후 열이 지속될 때는 익산시보건소(859-481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김화욱 기자 2012.12.07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겨울철새 잇따라 발견

익산시 춘포면-석탄동 만경강변 등 청둥오리서 바이러스 검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겨울철새가 만경강과 금강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익산시 춘포면과 석탄동 만경강변, 충남 서천군 장항 금강변에서 각각 포획한 청둥오리 3마리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2월 6일부터 인근에서 2차례 더 포획했던 겨울철새에서도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들 겨울철새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났지만 일부에선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H7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올겨울 만경강 중하류(익산시 · 완주군 접경)에 둥지 튼 겨울철새의 활동반경은 경기나 충남권 도래지보다 최대 13배 이상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먹잇감을 찾거나 휴식을 위해 가깝게는 24.5㎞ 떨어진 군산쪽 만경강 하류, 멀게는 26.6㎞에 달하는 군산 나포 십자들녘 인근 금강 하류까지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주변 가금류 농장은 방역을 강화하고 겨울철새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농민들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즉각 축산당국에 신고해줄 것도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선 2006년 첫 AI가 발병한 이래 2008년과 2010년 등 2년 주기로 재발해왔다. 한번 발병하

면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직접 피해액만도 적게는 350억원부터 많게는 1,000억 원대에 달했다.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 2012.12.10

광주 · 전남 환경이야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어떻게

지난 2010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가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3월까지 전국 7개 시 · 도에서 216개소의 매몰지가 조성됐다. 광주 · 전남 지역에서도 닭, 오리 등 약 330만 마리를 살처분해 인근 지역에 매몰했다.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10월~4월)까지는 철새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 등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시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철새 등 조류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기가 힘들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감염된 닭, 오리, 철새 등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가금사육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분변,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 차량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 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사육농가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육장 청소와 소독을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농장의 출입통제를 강화와 함께 방문객 및 출입차량을 철저히 소독해야하고, AI 발생지역 출입 및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철새 도래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 5일 이상 가금류 사육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극심한 상실감 등 정신적 피해를 막는 길은 사육농가와 방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질 것이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주일보 조훈제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2012.12.12

김천시 조류인플루엔자(AI)
선제적 차단방역

최근 전북 익산시 만경강 지역 청둥오리로부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7형) 검출과, 올겨울 유난히 영하의 잦은 기상으로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선제적 차단방역대책을 수립 · 추진해 AI 유입방지

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AI 발생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 철저한 농장소독을 위해 긴급방역용 소독약 700Kg, 생석회 42톤, 계사 입구 발판소독조 160개를 구입, 농가에 공급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자체방역이 취약한 산란밀집지역은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수시 소독 지원활동을 펼친다.

정용현 농축산과장은 "가금사육농가는 과거 AI 발생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주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가급적 AI 발생국인 대만, 중국, 홍콩을 피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닭 · 오리 사육농가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예찰을 강화하고, 농장소독 및 방역일지작성,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전반적인 농장 차단방역 실태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황지현 기자 2012.12.12

인도네시아에서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견, 전문가들 사람에게 전염될까 우려

지난 12월 12일 싱가포르 '연합조간'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발견된 바이러스는 독성이 치명적이어서 더욱 주의를 끌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종 AI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리 3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되어 폐기됐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1'바이러스와 유사한 종류로 추정되며 인체에 대한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당국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현재 바이러스의 출처는 기존 AI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거나 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AI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보건기구의 기록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359건의 AI 사례 중 159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이다.

내일신문 2012.12.12

용수저수지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 비상

저수지 중심 반경 10㎞ 안 가금사육 농가 이동 제한

제주에서 조류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분변을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지난 12월 14일 밝혔다.

용수철새도래지 반경 10㎞ 내에는 양계농가 20가구에서 38만7768수, 메추리 농가 1가구에서 8만수, 오리 4농가에서 1736수, 기타 가금 1농가 41수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0년 용수철새도래지에서 H5형과 하도철새도래지에서 H4형, 올해 하도철새도래지에서 H6형이 검출된 바 있다. 이들 AI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모두 밝혀졌다.

도는 용수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용수 저수지 중심 반경 10㎞내에 위치한 가금사육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내 모든 가금농가의 임상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조류인플레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닭, 메추리, 기타가금의 사육농가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조류인플레엔자인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경우 사료섭취량 감소, 갑작스런 폐사, 다리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안명종창,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증상 등을 보인다. 그러나 H4, H5, H6형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도는 한경면 용수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류 바이러스 지역표시를 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의 방문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2012.12.15

제주 철새도래지 분변서 또 AI바이러스 검출

철새도래지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7일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4점 가운데 2점에서 AI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각각 H5형, H7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동시에 채취한 분변 가운데 1점에서도 AI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정밀검사한 결과 지난 12월 14일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용수저수지 중심 반경 10㎞ 안에 있는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계속 유지되며 저병원성이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도가 주변에서 사육하는 닭 · 메추리를 대상으로 벌인 임상 및 혈청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사육농장은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2012.12.20

도축장 85% 위생수준 양호... 감독강화로 매년 향상

전국 126개 도축장의 안전 위생수준을 점검한 결과 상등급 도축장은 33%(41개소), 중등급 52%(65개소), 하등급 15%(2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도축장의 약 85%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126개 도축장(소 · 돼지 74개, 닭 · 오리 52개)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12년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12월 25일 밝혔다.

구분	상	중	하
전체(126개)	41개소(33%)	65개소(52%)	20개소(15%)
포유류(74개)	26개소(35%)	40개소(54%)	8개소(11%)
가금류(52개)	15개소(29%)	25개소(48%)	12개소(23%)

※ 2012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결과

이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으며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미생물 오염도 검사성적을 합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을 분류했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전체 126개소 중 상등급 41개소(33%), 중등급 65개소(52%), 하등급 20개소(15%)로 나타났다. 2010년 중등급 이상 도축장은 65%에 그쳤고 2011년에는 79%, 2012년에는 85%로 향상됐다.

시 · 도 소속 검사관이 상주해 위생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 · 돼지 도축장의 경우 닭 · 오리 도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 · 상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준에 상응한 검사체계를 갖추기 위해 책임수의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닭 · 오리 도축장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시 · 도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으로 전환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점검 · 평가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2개소(소 · 돼지 17개소, 닭 · 오리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시 · 도에 행정조치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도축장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이 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통한 도축장 위생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및 판매점에서 상등급 도축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우수도축장(상등급) 표시허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거점도축장인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하등급 도축장은 집중적인 위생점검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상위업체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홍보해 도축장 안전 ·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은지 기자 2012.12.25